

통상 이슈브리프

2025.04.11

美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강금윤 수석연구원 (02-6000-5620, gy.kang@kita.or.kr)

I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당초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전품목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
- 관세 부과 근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 관세 부과가 가능한 수단을 활용
 - *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에 따라 마약·불법이민 관련 남부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캐나다와 접경한 북부로 확대해 對캐·맥·중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으며('25.2.),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발표('25.4.)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강화('25.2.)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25.3.)에 활용
- 취임 첫 날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4/1)됨에 따라 향후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재검토, 신규 對中 301조 조치, 수출통제 강화, 우려했던 해외투자 제한, USMCA 등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등 비상호적 무역관행 검토 등을 제안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조치 현황(4/11 기준) >

현지 발표일	대상	근거법	대상국	관세율	최초 시행일
2월 1일	전 품목	IEEPA	캐나다, 멕시코 중국	최대 25% 10%+10%	2월 4일 2월 4일 및 3월 3일
2월 10~11일	철강, 알루미늄	232조	모든 수입국	25%	3월 12일
3월 24일	전 품목 (세컨더리 관세)	IEEPA	베네수엘라산 원유 · 가스 수입국	25%	(잠정) 4월 2일
3월 26일	완성차	232조	모든 수입국	25%	4월 3일
	자동차 부품		모든 수입국	25%	5월 3일
4월 2일	보편관세	IEEPA	모든 수입국	10%	4월 5일
	상호관세		57개국	한국 25% (국별 차등)	4월 9일

자료 : 백악관 관보 참고하여 저자 정리

주: 관세 조치별 면제·연기 여부가 상이하므로 조치별 공식 문서 확인할 필요

□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관세율 상향 또는 하향이 가능함을 명시¹⁾

○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당일(4/9), 보복조치를 시행한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연기해 국별 협상 가능성을 시사

II 주요국 대응

□ 주요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불(보복)’ 조치부터 ‘관세인하(협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①보복, ②유보, ③신중, ④협력 및 협상, ⑤협조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별 특성이나 미국의 반응에 따라 이들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

미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

구분	대응 강도	내용	특징
①보복	매우 강함	▪ 미국과 동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의 관세 보복 또는 무역 제재 시행	▪ 단기적 무역 전쟁 가능성, 정치적 시위성 강함
②유보	강함	▪ 보복 조치를 고려하되, 시행은 일단 유보하여 협상 여지를 남김	▪ 대내외 조율 가능성
③신중	중간	▪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상황을 관망	▪ 미래 협상력 확보 목적
④협상	약함	▪ 미국과의 협상 채널 적극 활용, 보복 자제	▪ 관세 면제·유예 확보 목적
⑤협조	매우 약함	▪ 미국 정책에 동조 또는 일부 양보하며 우호적 관계 유지	▪ 외교·안보 연계 고려한 전략적 동맹 강조

자료 : 저자 구분

1) 비상호적 무역 협정(agreements)을 시정하거나 경제·국가 안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으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힘. (자료: The White House(2025.4.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The White House.)

○ **[중국: ①보복]**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강경 대응

- **(보복 품목 확대)** 미국의 관세 및 보복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대응 수위를 높임

* 미국산 에너지·농기계 등 제한적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한 1차 보복조치와 달리, 2차 보복조치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육류·유제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 확대

- **(상호관세 맞불)** 미국의 對中 상호 관세 및 추가 관세와 동일 수준의 보복관세를 잇따라 발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 대응

미국 조치		중국 대응	발표일	시행일	주요 내용
對中 10% 관세	→	1차 관세	'25.2.4.	'25.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0개 품목*에 대해 10~15% 관세 부과 *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농기계, 트랙터류 등
對中 10% 추가 관세	→	2차 관세	'25.3.4.	'2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740개 품목*에 대해 10~15% 관세 부과 * 밀, 옥수수, 소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상호관세	→	3차 관세	'25.4.2. '25.4.9.	'25.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4/9) 美 재보복에 추가 관세 34→84%로 상향
			'25.4.11.	'25.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美 재보복에 추가 관세 84→125%로 상향

자료 :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다각적 대응)**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를 통한 기업 제재 등을 병행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다각적으로 대응

* ▲수출통제 기업 추가(31개社),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21개社) ▲대두 수출 자격 중단(3개社), ▲수출 자격 정지(6개社), ▲미국산 원목 수입 잠정 중단 등

○ **[EU: ①보복 및 ④협상 병행]**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발효되자 즉시 보복관세(최대 25%) 부과를 발표한 것과 달리,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상호무관세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 피력

- **(보복 조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3/12)되자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즉각 단계적 보복관세 발표

* 보복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 및 철강·알루미늄 반제품·완제품·파생제품까지 포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 **(보복 연기①)** 트럼프 대통령의 재보복 위협(유럽산 주류 200% 관세)에 대한 일부 회원국 우려를 고려해 당초 4월 초 발효 예정이던 1단계 보복 조치 시행을 연기

• **(보복 연기②)** 최종적으로 1,600개 이상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를 두 차례(4/15, 5/15)에 걸쳐 부과하는 방안에 회원국간 합의했으나²⁾,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연기에 상응하여 EU도 보복조치를 90일간 보류할 것을 발표³⁾

- **(협상 병행)**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EU는 미국측에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특정 산업재에 대한 상호무관세(zero-for-zero)를 제안하며 협상 의지 적극 피력(4/7)⁴⁾

2) Joanna Sopinska(2025.4.7.), "EU to target US goods with up to 25 percent tariffs in response to metals levies (update*)", Mlex; European Commission(2025.4.9.), "Commission proposal to impose trade countermeasures against US obtains necessary support from EU Member States", European Commission.

3) European Commission(2025.4.10.),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European Commission.

○ **[캐나다: ①보복 및 ⑤협조]** 맞불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마약·이민 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조하며 관세 면제·유예를 이끌어냄

- **(맞불 조치)** 마약·이민 관련 IEEPA 관세 및 품목별 관세에 대응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보복 관세 발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캐나다 대응

미국 조치	캐나다 대응	시행일	주요 내용
對멕시코 25% 관세	→ 품목별 25% 관세	'25.3.4.	▪ 가금류, 유제품, 의류 및 생활용품 등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232조	→ 품목별 25% 관세	'25.3.13.	▪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을 포함한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자동차 232조	→ 자동차 25% 관세	미확정	▪ USMCA 미준수 차량에 관세 부과

자료 : 캐나다 재무부 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주(州)차원 보복)**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 북부向 수출 전기에 25%의 추가 요금 부과를 발표(3/10) 했으나, 미국의 맞보복(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에 양국은 추가 요금 및 관세 부과 보류

- **(협조)** 국경·마약문제를 이유로 美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와 관련하여,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국경 강화 및 펜타닐 유입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관세 유예를 얻어냄(2/3)

○ **[멕시코: ②유보]**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되 시행은 일단 유보하여 협상 여지를 남김

- **(보복 의사)**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첫 IEEPA 관세 조치가 발표된 직후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하는 플랜B*를 실행”할 것이라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비(2/1)

*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농산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5~20% 보복관세 부과인 것으로 알려짐⁵⁾

- **(유보적 입장)**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직접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멕시코 반응

미국 조치	멕시코 인사	주요 발언
對멕시코 25% 관세	→ 셰인바움 대통령	(2/1)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하는 플랜B 실행 지시” (2/2) “멕시코가 범직 조직과 동맹을 맺었다는 백악관의 중상모략적 주장과 우리 영토에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
	경제부 장관	(2/3) “미국의 관세는 USMCA의 명백한 위반”
철강·알루미늄 232조	→ 셰인바움 대통령	(3/13) “4월까지 기다렸다가 對美 보복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자동차 232조	→ 셰인바움 대통령	(3/28) “4월 3일에 포괄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것”, “다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관세	→ 셰인바움 대통령	(4/3) “미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구축” (4/7) “(향후) 보복관세를 배제하진 않지만 대화 지속을 선호”
	경제부 장관	(4/3) “셰인바움 대통령의 전략은 효과적, 멕시코는 특혜를 받음”

자료 : 언론 종합

4)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라이엔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항상 좋은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시사. Koen Verhelst(2025.4.7.), “EU offers Trump removal of all industrial tariffs”, Politico.
5) David Alire Garcia and Ana Isabel Martinez(2025.2.3.), “Mexico vows retaliation to Trump tariffs without detailing targets”, Reuters.

- **[영국: ③신중]** EU의 보복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화 지속
 - **(보복 신중)**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 당시, EU와 캐나다는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신중론 유지
 - **(전략적 협상)** 영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보편관세(10%) 인하를 위한 협상에 5/1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잠정 보복 관세 리스트*’ 발표(4/4)
 - * 미국산 육류, 생선, 유제품, 위스키, 오토바이 등 영국 대미 수입의 27%를 차지하는 제품 목록 공개 ([링크](#))
 - **(국익 우선)** 스타머 총리는 당초 ‘미국과 무역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3/28) 보편관세가 발표되자 ‘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 밝히며 업계 의견을 수렴(4/3)
- **[호주: ④협상]**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미국과 **지속 협상** 방침

- **(보복 배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 협상이 실패로 끝나며 호주 총리는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고 비우호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보복조치 가능성은 일축**했으며(3/11),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는 **내수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를 우려해 보복 가능성을 배제**(4/3)
- **(지속 협상)**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 면제를 얻은 경험이 있는 호주는 앞으로도 면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호주 총리의 주요 발언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 (3/12) “관세와 무역 갈등의 심화는 **경제적 자해의 한 형태**이며,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요인”
- (3/12) “앞으로도 **면제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이전에도 면제가 성사되기까지 몇 달이 걸림”
- (4/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양국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친구의 행동이 아니다”, “가격 상승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하향 경쟁에 동참하지 않을 것**”

자료: 언론 종합

- **[일본: ④협상 및 ⑤협조]**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
 - **(안보협력 강화)** 미국과 정상회담(2/7)에서 대미 투자·수입 증대 및 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확인하며 우호적인 관계 조성
 - * ▲LNG·철강·AI·자동차 등에 대한 대미 투자 규모 \$1조로 확대, ▲미국산 LNG 및 천연자원 수입 확대, ▲일본 방위비 부담 증가 등
 - **(대화 및 방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보편관세(10%) 및 상호관세(24%) 부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약 25분간 통화했으며, 장관급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4/7)

- **【인도: ⑤협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추진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 (**관세 인하**)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 발표(2/1)⁶⁾
 -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인도 재무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 회사들의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4/1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3/25)⁷⁾
 - (**무역 협상**) 미 무역대표부(USTR) 협상단은 인도를 방문해 진행한 양자무역협상에서 균형 잡힌 무역관계와 방위·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3/26~29)⁸⁾
- **【베트남: ⑤협조】**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관세 인하에 협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 연기를 위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철폐 및 구매 확대를 약속
 - (**관세 인하 등**) LNG, 자동차, 에탄올, 아몬드, 체리 등 다양한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베트남 내 미국의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 출시를 허용(3/26)
 - (**관세 철폐 및 미국산 구매 확대**) 베트남 고위 관계자는 **대미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베트남 총리는 성명에서 안보·방위 물자를 포함한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밝힘(4/8)
 - (**관세 연기 요청**) 46%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은 부총리를 급파해 관세 부과를 45일 연기해달라고 요청(4/8)

(참고) 한국의 대미 통상 대응

-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
 - **1/6~10, 산업부 장관 방미:**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와 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 **2/17~20, 산업부 통상차관보 방미:** 상호관세 등 관세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대미투자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당부
 - **3/20~21, 산업부 장관 방미:** 美 상무장관에게 상호관세 관련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
 - **4/8~9,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국별 상호관세(韓 25%) 등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방미
 - **4/8, 한미 정상 간 통화:**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 협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췌

6) 미국산 고급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을 겨냥하여 1,60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 수입 관세를 50%에서 30%로 인하했으며, 이밖에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합성 향료 에센스, 어류 가수분해물(hydrolysate), 폐기물 및 스크랩, 등에 대해서도 최대 80%p의 관세 인하 단행 (자료: 박병열(2025.2.20.),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7) 박익래(2025.3.25.), “美 상호관세 발표 임박하자…인도, '구글세' 폐지 추진”, 연합뉴스.

8) Manoj Kumar(2025.3.29.), “India and US making progress towards trade deal, officials say”, Reuters.

Ⅲ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선(先) 발표하고 후(後)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재보복으로 대응
- '25.2월 對개·멕시코 IEEPA 관세 관련 국경 및 마약 문제에 협조한 캐나다·멕시코에는 USMCA 적용 수입품 대상 관세를 면제했으나, 보복조치를 시행한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관세를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관련 75개국 이상이 보복조치 없이 협상을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일시중단(pause)할 것을 발표했으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
 - * 마약 밀반입에 근거한 IEEPA 관세(20%)를 합산할 경우 트럼프 2기 對中 추가관세는 145% (4/10 기준)
- 일부 관세 면제·연기에도 불구하고 보편관세 및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
-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아직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소 25% 관세 부과를 예고(2/18)하고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빠져 향후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가능성
- 미국 관세 조치의 근본 원인인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별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관세, 방위비 분담금, 기타 무역 현안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으며(4/9), 향후 무역 협상은 양국 간 무역 균형을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주요국 대응 전략과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국가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현황			
		마약·국경 관련 IEEPA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보편관세	상호관세
중국	①보복	10%+10%	25% *USMCA 일부 예외 적용	10%	34% + 50%
EU	①보복 및 ④협상	-			20%
캐나다	①보복 및 ⑤협조	25%			-
멕시코	②유보	*USMCA 품목 예외			-
영국	③신중	-			-
호주	④협상	-			-
일본	④협상 및 ⑤협력	-			24%
인도	⑤협력	-			27%
베트남	⑤협력	-			46%

자료: 저자 작성 (2025.4.9. 기준)

주1: 주요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므로 세부 면제·예외 내용 원문 확인 필수

주2: 상호관세 부과시 보편관세 배제, 상호관세는 4/9부로 90일간 연기

□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다수의 미국 관세 조치가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행일 및 면제·예외 조항 등을 숙지해 실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는 시행일(3/12) 이후 미국 반입분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됐으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는 시행일(4/5 또는 4/9) 이전 선적된 제품에 대해 시행일 이후 반입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데 차이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해외 사업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미국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현지 통상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
- 중국 등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우회수출에 연류되지 않도록 유의

□ 우리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응하여 ▲긴급 유동성 3조원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연장·확대, ▲수출바우처 확대,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등 긴급 대책을 마련(4/9)
- 또한 정부는 예상되는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응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상향, ▲환경 규제 완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기술개발(R&D) 기획·추진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